

보도설명자료 (13. 11. 1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「청 “공공구매협정 국회 제출” (13.11.11, 내일신문) 및 靑 “정부조달협정, 대통령 재가후 비준서 WTO 기탁” (13.11.11, 연합뉴스)」 보도에 대한 입장

1. 기사내용

- 앞서 일부 프랑스 언론은 “박 대통령이 한국의 공공부문 조달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한다고 연설해 프랑스 기업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”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.(13.11.11, 내일신문) 한편,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내 “박 대통령 창조경제의 실체가 ‘공공부문 민영화와 대외개방’이었는지 묻고 싶다’고 비판했다.(13.11.11, 연합뉴스)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조달은 WTO 정부조달협정(GPA) 가입으로 1997.1.1 자로 개방됨.
 - 이로써, 중앙정부기관, 지방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(이하 ‘양허기관’)의 일정규모 이상의 조달시 GPA 43개 회원국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허용됨.
 - 양허기관의 물품, 서비스(건설서비스 포함) 조달시에만 적용되며, 투자조치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.

- 2012.3.30. 공공조달의 추가 개방을 위해 개정 GPA가 채택됨.
 - 기존 GPA와 비교시 개정 GPA에서는 전자조달, 과거 수주실적의 입찰참여 조건화 금지 등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으며, 회원국의 개방수준도 높아짐.
 - 우리나라는 EU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 분야를 상호 개방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기업의 유럽 조달시장 참여를 위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.

- GPA 회원국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(12.3-6, 인니 발리) 계기 개정 GPA 발효를 목표를 현재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중임.

- 참고로, 정부조달협정은 공기업의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.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이민철 과장(02-2110-4493)